



2024년 1호
2024.2.13.

금속노조 교육지

발행 전국금속노동조합 | 발행인 장창열 위원장 | 편집 교육실 ☎ (02)2670-9506 | 홈페이지 www.kmwu.kr

금속노조 정조준한 윤석열, 금속답게 정면돌파

조합비 회계공시, 타임오프 시정지시 행정개입 칼 빼들고
자동차, 조선, 철강 등 금속노조 콕 짚어 선전포고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18일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2024년에는 “민간 사업장 중심으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조선, 철강 업종과 1천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라 밝혔다. 금속노조를 정조준하겠다는 선전포고다.

또한 정부는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가 정한 시스템과 양식에 따라 회계공시를 해야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악했다. 노동부는 노조 회계공시 제도의 목적을 조합원의 알권리 강화, 노조의 민주성과 사회적 책임성 강화, 노조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함이라고 밝혔지만 누가 봐도 노조를 흠집내 노조와-조합원, 노조와-국민(노동자)을 갈라치고 노조를 정부 손아귀에 쥐고 흔들겠다는 속셈이 너무도 명백히 드러난다.

회계공시, 타임오프 시정지시는 행정개입 탈을 쓴 노조파괴 시나리오

14년전 이미 겪었다, 본질은 명확하다, 패배를 되풀이 말자

윤석열 정부의 노조회계공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빌미로한 민주노조 공격은 과거 이명박정권의 노조파괴 시나리오와 너무도 닮아있다. 단순히 세액공제 혜택 여부의 문제가 단언코 아니다.

윤석열식 버전2 시나리오를 예측해보면, -▶회계공시 빌미로 세액공제를 안해주겠다며 조합원 개개인에게 불이익을 주고 -▶개별 사업주들에게 타임오프 ‘시정지시’를 통한 압박으로 사업장 노사간 갈등 유발하고 -▶세액공제, 타임오프로 인한 불만이 노조 내부를 향하게 하여 분란을 조정하고 -▶노동조합의 투쟁을 유도, -▶이에 대해 불법 딱지와 손배가압류, 사법조치를 통한 노조 파괴, 노조 무력화라는 전형적인 시나리오다.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금속노조를 지탱하고있던 중견사업장들이 속수무책으로 넘어갔고 그 자리에 회사측 사주를 받은 복수노조가 들어섰다. 그렇게 깨져나간 민주노조는 아직도 대다수가 조직을 회복하지 못하고 소수노조로 교섭권도 없이 버티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노조파괴시나리오는 정부, 자본에게는 밀쳐도 본전이지만 우리에게만 민주노조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다.

첫째, 노동조합 손발을 잘라라

근로시간면제제도 감독, 시정지시 남발로 노사 갈등과 부당노동행위 조장

정부는 지난해 1천인 이상 사업장 중 노동조합이 있는 51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 및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금속노조를 타겟으로 직서열 사업장에 대한 기획근로감독을 실시, 대다수 사업장이 법적 한도나 인원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다며 “시정지시” 라는 행정개입을 남발했다.

노사가 자율로 정해야 할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해 법으로 일률적 상한선을 정해놓고 초과하면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이다.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나 정부가 노동조합 활동을 개입하고 위축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국제노동기구인 ILO에서도 타임오프제도가 노사간 자율적 교섭을 제한하고 방해하는 데 악용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는데 타임오프제도를 빌미로 정부와 사용자가 짜고 탄압해 들어오는 지금 한국의 상황이 딱 그렇다.

회사는 이때다 하며, 정부의 타임오프 시정지시를 핑계로 단체협약을 안 지키거나 전임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복귀 명령을 내리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노조 내부 분열을 조장하라

조합원 개개인 세액공제 불이익 압박으로 노조 내부 분열 조장

윤석열은 이명박, 박근혜가 내세웠던 ‘노동개혁’이 아닌 ‘노조개혁’이라고 꼭집어 노조를 조준했다.

노조 공격의 첫 출발은 건설노조 “건폭몰이”였고 그 다음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들고나왔다.

세금이 단1원도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우리 조합비에 대해 회계 투명성 운운하며 세액공제를 미끼로 노조 회계를 공개하라고 협박하고 있다. 공시하지 않으면 ‘비리 노조’라 비난하고, 공시해도 트집을 잡는다. 노조법 시행규칙까지 개정해가며 산별노조 하부조직(지회, 분회까지) 체계와 현황을 모두 제출하라고 하고 있다. 마치 떡하나 주면 안잡아 먹지~ 수준이다.

노동조합은 자본뿐 아니라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주성이 담보돼야 한다. 노조의 회계·감사자료와 현황은 우리 스스로 정한 규약과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해 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세째, 도덕성에 흠집 내고 민주노조 고립시켜라

“깜깜이 노조회계” “지출 절반 인건비” 자극적 보도로 흠집 내고 탄압 명분 쌓기

민주노총이 지난해 10월 회계공시를 수용하기로 하자 보수·경제 언론들은 일제히 “노조개혁 원칙 통했다”, “밑 어붙였더니 통했다”는 제목을 단 기사를 쏟아내며, 정부는 “노동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화자찬했다. 회계공시 이후에는 예상대로 “한국노총보다 수입 적은 민주노총, 인건비는 두 배 넘게 써”, “한노총 이어 민주노총도 ‘깜깜이 노조회계’ 현대차지부 지출 절반 가까이 인건비로” 등 자극적인 보도 제목들을 뽑아내며 노동조합 흠집내기에 혈안이 됐다.

그뿐 아니라 집단탈퇴를 금지하고 있는 산별노조를 대상으로 규약 시정명령을 통해 민주노총과 산별노조의 조직력을 훼손시키고 민주노총 지역본부에 지자체 보조금 지급이나 복지관 위수탁 계약이 어렵도록 만들어 민주노총과 산별노조 지역조직의 사무실까지 빼앗는 치졸한 탄압을 벌이고 있다.

금속노조, 정기대의원대회 통해 굴종적 회계공시 거부 투쟁 결의하기로

금속노조는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회계공시에 대한 노조 방침을 토론하고 지부별 현장토론과 조합원교육을 통해 금속노조를 향한 윤석열정부의 선전포고에 맞선 투쟁을 조직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2월 28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굴종적인 회계공시를 단호히 거부하고 윤석열 정부 퇴진 투쟁을 결의할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노조과파 도발에 맞장뜨는 전 조직적이고 강고한 투쟁을 통해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2024년 투쟁을 승리로 만들어 내자.